

#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1994. 12.

吳 承 烈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目次

I. 問題提起 .....	1
II.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의 背景 및 內容 .....	2
1. 背景 .....	2
2. 基本方向 .....	2
3. 主要 措置內容 .....	3
III. 北韓의 二重的 反應 .....	7
1. 公式的 反應 .....	7
2. 非公式的 態度 .....	8
3. 意圖分析 .....	8
IV.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10
1. 對南 政經分離 政策 .....	10
2. 對南 企業誘引 政策 .....	12
3. 外資誘致 政策 .....	14
V. 對北經協의 政策的 考慮事項 .....	15
1. 戰略的 考慮事項 .....	15
2. 對企業政策 考慮事項 .....	17
3. 對外政策 考慮事項 .....	19

## I. 問題提起

- 정부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타결(1994.10.21)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판단하에 핵·경협연계 완화조치를 발표하고(1994.11.8), 남북관계 진척 정도에 따라 後續措置를 취하기로 하였음.
- 금번 조치는 초보적 경협방안에 불과하나, 핵문제로 인한 남북간 경색국면 타개 및 화해·협력기 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능동적으로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정부의 조치 발표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다양한 남북경협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나, 북한의 체제개혁의지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대응정책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경협안의 제시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도 있음.
- 본 보고서는 우선 핵·경협연계 완화조치의 발표배경 및 내용을 요약하고 북한의 반응을 분석한 다음, 최근 북한 경제정책 기조에 근거하여 북한의 대응정책을 전망하고 대북경협추진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II.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의 背景 및 內容

### 1. 背景

- 북미회담 타결 이후 구체적 合意事項 이행을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바,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경협 연계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
- 김일성 사후 북한정세는 일단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작금의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체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적절한 핵·경협 분리시기 및 방법과 단계별 경협추진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우리기업의 대북한 접촉 및 交流窓口 확대에 대한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2. 基本方向

- 정부의 조치는 북한 핵문제 및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신축적으로 경협범위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금번 조치는 민간차원의 「기업인 방북」,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시범경협사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분야별 경협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구도를 제시하였음.
- 또한 정부의 조치는 相互 補完과 互惠의 바탕에서 남북 모두의 실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民間次元의 경제교류협력이 법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3. 主要 措置內容

#### 가. 企業人 訪北 등 南北經濟人事 相互訪問 허용

- 시범사업 협의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되, 대규모 사업관련 방북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허용함.
  - 방북관련 신청은 통일원 남북교류협력상담실(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층)에서 접수하며, 訪北豫定者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을 「통일연수원」에서 실시하게 될 것임.
  - 방북신청시 신청서에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방북을 승인할 것이며, 협력사업을 위한 방북신청시

에는 이외에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민간차원에서의 북한경제인 초청을 통한 투자설명회, 산업현장 견학 등의 사업추진을 허용함.
- 기업인의 訪北經路에 대해서는 남북기업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제3국 혹은 판문점을 통한 왕래가 모두 가능할 것이며, 정부는 판문점을 통한 왕래의 편의를 위해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 나. 委託加工 交易 活性化

- 위탁가공교역과 관련하여, 생산설비의 운용, 생산기술지도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자 방북을 허용하되,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사업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절함.
  - 기술자 수시방북 절차 간소화 등의 便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임.
-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을 허용하되, 대규모 설비 및 무상반출로 이루어지는 설비 등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규모 설비반출은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설재 반출을 위한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補完할 것임.

#### 다. 示範的 經濟協力事業 허용

- 남북경협을 위한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단계에서는 示範的 事業을 통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경험축적과 상호 이해의 증진이 필요함.
- 경제협력사업의 대상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북한주민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분야: 라면, 국수, 된장, 고추장, 조미료, 설탕, 식용유, 비누, 치솔, 치약 등.
  - 단기간내 경협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분야: 봉제의류, 완구, 양말, 가방, 신발, 피혁, 전자부품 등.
  - 민족공동체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시범적 고용 등.
- 제3국과의 합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와 국제기구 관리하의 多者間 협력사업 참여 등을 허용함.
- 대리점 및 출장소 등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를 허용하며, 사무소의 업무영역은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활동, 자료소개 및 자문활동 등 非營業活動을 위주로 함.
  - 북한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는 본사 등 국내기업의 위임하에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라. 南北經濟交流協力 關聯 制度的 裝置 마련

- 이번 조치는 초보적 단계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이며,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당국간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을 위한 制度的 틀을 마련해 나갈 것임.
- 이와 같은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위 등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노력도 함께 경주해 나갈 것임.
- 「핵-경협 연계완화」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등 남북경협·교역 관련규정을 확정·시행할 예정임.

마. 「南北協力基金」 지원문제

- 民間次元의 남북경협은 민간기업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남북당국간 제도적 보완을 통한 경협착수 이전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것임.

### Ⅲ.北韓의 二重的 反應

#### 1. 公式的 反應

- 정부의 핵·경협연계 완화조치 발표 이후 북한은 對南前衛機構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94.11.10)를 통해 남한정부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대남선전공세를 크게 강화하고 있음.<sup>1)</sup>
  - 「조평통」 담화는 경협완화조치가 새로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가 획기적인 정책변화인 것처럼 미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남한정부가 대외적인 고립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민 것이며, 그동안 추구해온 대결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2년전 남북간에 합의서들이 마련되었으며, 협력사업을 담당할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의 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들도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남북한은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태는 대화이전의 대결국면으로 역전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담화」는 김영삼 대통령이 진심으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원한다면 입장변화를 행동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반북대결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1) 「조평통」 담화는 1994년 11월 11일 평양 중앙방송 보도.

## 2. 非公式的 態度

- 정부의 조치발표 전후로(94.11.5~11.11)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고민발) 회장 이성록과 「대의경제위원회」 부위원장겸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우가 차례로 북경을 방문하여 남한기업인과 비공식적 접촉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북투자를 요청하였음.
  - 이에 더하여 북한은 94년 10월~11월 동안 북경에서 남한의 大企業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경험목적의 방북을 위한 초청장을 발급한 바 있음.
  
- 그러나 94.12.8 북한당국은 구체적 설명없이 북경의 남한기업인에 대해 방북불허방침을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3. 意圖分析

- 「조평통」의 담화내용은 우리정부가 밝힌 민간주도 經協活性化 조치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며, 조치발표의 의도와 그동안 남한정부가 취해온 정책을 비난한 것임.
  - 남북간에 기왕에 합의되었던 「기본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관련사항들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

을 남한정부 탓으로 돌림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합의 사항이 유효할 수도 있다는 二重的 姿勢를 보여주고 있음.

- 북한당국은 「담화」를 통해 합의사항이 유효할 수 있는 前提條件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否定的 立場을 명백히 하였음.
- 그러면서도 「담화」는 남한정부가 진정한 협력과 화해를 바란다면 이를 행동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남한정부의 대북한 政策基調가 다시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하였음.
  - 원색적인 호칭과 어조를 사용하여 남한정부를 비난함으로써 북한당국은 경협활성화 조치에 대해 구체적 「거부」를 할 수 없었던 입장과 실질적으로는 守勢的인 「담화」내용을 은폐하려 했음.
- 그러나 민간기업인(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宥和的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한정부와 민간기업의 분리를 통하여 남한정부를 고립시키고, 선별적으로 남한기업과의 경협을 추진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음.

#### IV.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선별적으로 민간기업과의 경협을 추진하는 한편, 외자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한기업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북한의 대응정책은 對南 政經分離 政策, 對南 企業誘引 政策, 外資誘致 政策 등의 측면에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임.

##### 1. 對南 政經分離 政策

-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미 부분적으로는 政經分離政策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남 비방을 계속하면서도 간접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은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음.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남한기업의 투자를 희망하는 신호를 보내 오고 있음.
  - 중국 등지를 통해 남한기업과 접촉을 유지해 왔으며, 경협완화 조치 발표 이후에도 非公式的 接觸이 지속되고 있음
- 북한은 남한기업과의 경협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나, 제한적 대외개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정부를 배제하고 개별기업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선별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것임.

- 나진·선봉지역에 한정된 개방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민 통제가 필수적인 바,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한정부를 「主敵」으로 재설정하여 緊張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동서독 관계의 진전이 결과적으로 동독의 붕괴를 촉진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남한정부와의 대화를 기피하는 것이 體制維持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임.
- 북한은 최근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고민발)로 대남경제교류창구를 단일화하고 교류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북한당국 관할하에 「고민발」을 운용하여 남한기업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政府次元의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
  - 북한은 남북경제교류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접촉 및 대화재개 제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拒否反應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이와 같은 대남경협구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 대남비방을 강화할 것인 바, 비전향장기수 및 남한 인권문제와 국가보안법폐지 문제를 되풀이하여 제기할 것임.

## 2. 對南 企業誘引 政策

- 북한은 남한정부의 經協措置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당분간 기업인 방북의 실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남한기업과는 제3국을 통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관계발전에 주력할 것임.
  - 1993년도 남북한간의 간접교역규모인 1억 9,000만 달러중(북한의 총수출규모는 약 10억 달러) 90% 이상이 남한의 반입이며, 반입품목중 상당부분은 북한이 타국으로 수출하기 힘든 품목임을 고려할 때, 남한은 북한의 주요한 외화획득원임.
  - 북한은 향후 수출증진에 주력할 것인 바, 남한기업의 국제시장 진출경험과 기술은 북한이 매우 필요로 하는 무형적 자산이며, 남한기업과의 위탁가공교역 발전은 북한의 수출잠재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西方資本 誘致를 위해서는 남한기업과의 가시적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남북간의 긴장상태에 기인한 투자자들의 위험부담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유리함.
  
- 남한기업과의 경제교류 사실에 대해서 북한당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이며, 「고민밭」이나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는 활발히 접근해올 것으로 예견됨.

- 북한은 접촉상대로서 남한기업의 실무진보다는 기업총수 등을 선호할 것이며, 기업총수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남한정부의 政策變化를 유도하려 할 것임.
  - 북한의 남한기업인 방북 불허방침(94.12.8)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인 방북은 일괄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선별적·비공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남한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할 것임.
- 북한은 남한기업인사와의 접촉과정에서 북한경제관련 이권제공을 조건으로 남한기업의 지불보증을 통한 상업차관 알선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재 제공 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것임.
    - 남한정부가 기업인의 방북신청시 요구하고 있는 「신변보장 각서」발행을 조건으로 남한기업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
  - 부정적인 대내 파급효과 방지 및 남한정부 간여의 최소화를 위해 남한기업의 單獨投資보다는 중국기업과의 합작형식이나 제3국 現地法人 명의를 의한 투자를 요구할 것임.
    - 나진·선봉지대는 내부경제와 연계된 중국식 특구가 아니라, 홍콩과 같이 내부경제와는 분리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남한기업의 단독투자는 이 지역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정부차원의 대응과는 달리 당분간 간접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 관련 납기준수 및 품질제고에 주력하면서 호의적인 남한기업의 評價 및 여론조성에 노력할 것임.



### 3. 外資誘致 政策

- 북한은 북미관계의 개선을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북미간의 연락사무소 설립이 확정된 후에도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
- 따라서 북한은 경제실리를 위해서는 일본 및 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임.
  - 이들간의 경쟁심 유발 및 대북한 신뢰감 조성의 차원에서 남한기업과의 경협을 선별적으로 시도할 것임.
  - 이와 같은 목적하에 외국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남한기업과의 경제협력 추진상황을 과대 선전할 가능성도 있음.
- 조총련 및 해외교포에 대해 북한경제정책 변화를 선전함으로써 교포사회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여 교포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임.
- 나진·선봉 지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남한기업의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북한은 항만, 철도, 도로, 통신의 사용권 제공 등 중국 및 일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대신 이들 국가에 대해 사회간접시설 확충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 V. 對北經協의 政策的 考慮事項

- 남북한간 경제협력 추진방안은 상호 신뢰회복을 통한 화해·협력, 북한경제체제의 개혁 및 전환,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 개발 등을 통한 統一基盤造成에 그 정책목표가 있음.
- 이와 같은 남북경협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북한체제 개혁 유도를 위한 戰略的 측면과 對企業 정책 및 對外政策的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1. 戰略的 考慮事項

- 김일성 후계체제는 당분간 체제개혁이 아닌 체제보완적 차원의 제한된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할 것인 바, 우리 정부는 단계별 경협완화 정책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해야 할 것임.
- 또한 북한당국을 정부간 대화창구로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이 지나치게 우리입장만 고려한 비현실적 長期 經協計劃의 발표를 지양해야 할 것임.
  - 이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북한지역개발계획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불필요하게 북한당국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에 副作用을 가져올 수 있음.

- 경협활성화조치는 제1단계: 기업인의 방북허용,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및 시범사업 허용 → 제2단계: 대북경제교류를 위한 제도적 정비 → 제3단계: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적극적 경제개발 지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이 적극적 체제개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제2, 제3단계로의 이행을 서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함.
  - 북한은 대외경제관계 개선을 활용하여 침체된 경제의 회복을 꾀하는 동시에 현체제를 고수하려 할 것이므로,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은 이러한 북한의 정책목표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북한이 확실히 체제개혁 의도를 보일 경우에는 제2단계 및 3단계의 적극적 대북경협방안 추진이 바람직할 것임.
- 북한이 적극적인 體制改革에 진입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대남한 정책, 국제사회에의 참여의지 유무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경제정책 변화유무는 대내경제개혁,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내부경제의 연결, 생산재 및 소비재 시장 설립, 북한화폐의 평가절하조치, 투자구조의 지속적 변화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대남관의 변화는 기본합의서 실행 및 이산가족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대화재개 의사, 대남비방중지, 학술 및 문화교류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국제질서에서의 참여의지는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에 대한 시각,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합의서 이행상황, 북·미, 북·일관계의 진척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2. 對企業政策 考慮事項

- 북한의 選別的 수용을 전제로 할 때, 단기적으로는 기업차원의 접촉을 통한 시장논리 전파 및 정보확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대남 신뢰감 조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고민발」로 대남경제교류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는 반면, 남한기업은 상호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북한이 이를 惡用할 소지가 있음.
  -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근거하여 경협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손익이 철저히 기업 스스로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해야 함.
  - 정부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원칙준수 여부를 評價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측이 이권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무리한 요구를 해 오는 경우 기업이 經濟的 論理에 의해 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경협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척상황에 따른 엄격한 指針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허용범위내에서의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차별없이 허용해야 할 것임.
  - 개별업체의 선정은 참여권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간의 경쟁 등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북한상황의 변화로 경제교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업이 정부의 특혜나 先占者로서의 불로소득 획득에 목적을 두지 못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임.
- 정부의 경협활성화 조치중 가장 초보적인 사항인 기업인 방북성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기업인의 북한방문과 북한인사 접촉은 남북한간의 신뢰감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정보획득 및 남북한 정부의 간접적인 접촉을 위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북한 방문실적 등을 기업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나 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우리정부의 방침에 대한 북한의 거부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인 및 기술자 방북승인 內譯은 非公開를 원칙으로 해야 함.

- 대북진출기업간에 「기업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북한의 「고민밭」과 一對一 대화창구를 개설함으로써 우리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관철하도록 함.
  - 북한이 정부차원의 경협제도화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기업협의회」는 효율적인 민간차원의 교류가 정부의 뒷받침없이 불가능함을 주지시킴으로써 북한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전향적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3. 對外政策 考慮事項

- 북한은 남한정부를 배제하고 西方國家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체제유지 및 경제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북한의 의도 및 실상에 대해 관련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북 관계개선 범위 및 속도상의 共助體制를 확립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임.
  - 북한의 의도를 감안할 때, 미국과 일본 및 유럽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북 관계개선 속도를 가속화할 경우 북한의 체제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해 북한의 반응을 감안한 단계적·점진적 경협추진 방안이 북한체제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주지시킴으로써 대북한 접근속도에 있어서 우리와 共同步調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북한은 남한정부와의 공식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이므로, 정부는 미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수로 지원 및 대북경협이 진전이 남북대화 재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향후 남북경제관계의 확대 및 심화를 위해서는 국제경제체제에서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경제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임.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 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  
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北韓 官僚腐敗 研究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の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北韓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일 WORKSHOP :

KOREAN PENINSULA DEVELOPMENTS AND U.S.-JAPAN-  
SOUTH KOREA RELATIONS (vol. 1)

KOREAN PENINSULA ISSUE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2)

KOREAN PENINSULA TREND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3)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統一情勢分析 94-20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